

##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센터 사업 개편 방안

### 초록

- ◎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구조의 다양화, 관계의 유동성 심화 등 한국 사회 가족 변동은 지속되고 있음. 이는 혈연·혼인 중심의 가족 규범이 약화되고, 관계와 생활 중심으로 가족구성이 다원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 ◎ 그동안 가족정책은 이러한 변화를 '위기'로 인식하거나 취약계층 지원 중심의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온 경향이 있음. 그러나 최근 들어 가족 변화를 수용하고, 이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 중장기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있는 바, 기존 가족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정책의 주요 전달체계인 가족센터 사업을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가족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에 비추어 가족센터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였음.
- ◎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대안 모색을 위해 가족센터와 협력적으로 리빙랩을 운영하여 사업 영역 재구성, 사업의 실행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가족센터의 사업 개편 방안을 마련함.

### 연구 배경 및 목적

- ◎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구조의 다양화, 관계의 유동성 심화 등 한국 사회 가족 변동은 지속되고 있음. 이는 혈연·혼인 중심의 가족 규범이 약화되고, 관계와 생활 중심으로 가족구성이 다원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 ◎ 그동안 가족정책은 이러한 변화를 '위기'로 인식하거나 취약계층 지원 중심의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온 경향이 있음. 그러나 최근 들어 가족 변화를 수용하고, 이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 중장기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있는 바, 기존 가족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그 중 이 연구는 정책의 주요 전달체계인 가족센터 사업에 초점을 맞추었음.
-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원화되었던 가족정책 전달체계는 2016년 물리적 통합을 달성했지만 두 센터의 사업 방향과 내용은 병렬 배치되었으며, 예산 등 운영시스템의 실질적 통합에는 도달하지 못함.
-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가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2019년부터 생활 SOC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2021년에는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함. 그럼에도 가족센터의 사업은 아직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표 1> 가족센터(통합서비스 운영기관) 영역별 사업

사업영역	개정안
가족관계	부모역할 지원(임신·출산(부모)), 영유아기 부모 지원, 학부모 지원, 가족가치 교육, 아버지 역할), 부부역할 지원 (부부갈등예방·해결 지원, 노년기 부부 지원), 이혼전·후 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관계향상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다문화가족자녀 성장 지원, 가족상담, (손자녀 돌봄)조부모 역할 지원,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가족돌봄	가족희망드림 지원
가족생활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 지원, 다문화가족 초기 정착 지원,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1인가구 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사업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가족봉사단(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 공동육아나눔터(자녀돌봄 품앗이),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가족사랑의 날,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 패키지, 인식개선 및 공동체익식,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사업, 다함께 프로그램, 기타(사업 영역에 속하지 않는 사업)

출처: 여성가족부(2023), 2023년 가족사업안내(Ⅰ), p. 94.

- 선행연구에서는 기존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 없이 추진된 전달체계 개편의 문제점을 지적(이선형, 2018; 김영란 외, 2019; 손서희·김미영, 2019; 김영란 외, 2020)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변화를 반영하는 개편 방안 모색의 중요성을 강조(이선형, 2018; 김영란 외, 2019; 박정윤 외, 2019)한 바 있음.
- 이러한 배경 하에서 연구는 가족 변화를 수용하는 정책의 방향성에 맞춰 가족센터의 사업을 개편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 구체적으로 가족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에 비추어 가족센터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였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대안 모색을 위해 가족센터와 협력적으로 리빙랩을 운영하여 가족센터의 사업 개편 방향을 마련함.

## 가족 변화의 특징과 가족센터 사업 개편에 주는 시사점

-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가구 구성의 다양화와 가족의 유동성,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살펴볼 수 있었음.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가족센터 사업 개편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혈연·혼인 중심의 가족 규범이 약화되고, 관계·생활·친밀성을 중심으로 가족구성이 다원화되고 있음.
  - ▶ 더 나아가 ‘법률혼’이 아닌 다양한 친밀성과 파트너십의 확대도 전망되고 있음(송효진 외, 2021:72).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가족은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친밀한 관계이자 전 생애에 걸쳐 유동적으로 구성되는 관계라 할 수 있음.
  - ▶ 이에 가족과 개인의 삶을 지원하고, 변화하는 친밀성의 욕구에 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가족정책 시행이 필요함.
- 가족을 구성하지 않는 선택의 증가와 가족부양 등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볼 때, 개인의 돌봄을 가족에게만 의존해 해결하기는 점차 어려워질 전망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가족센터 사업 개발이 필요함.
  - ▶ 그간 돌봄의 사회화를 지원하는 의미있는 정책들이 수립·시행되고 있으나 현행 정책들은 여전히 상당 부분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설계됨.
  - ▶ 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노년기 1인 가구 및 노인 부부가구의 증가, 그리고, 비혼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가족 외부

돌봄에 대한 필요가 높아질 전망이다.

- ▶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돌보는 체계 구축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센터에서는 보다 확장적인 돌봄공동체 조성, 자기돌봄, 상호돌봄을 위한 돌봄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함.

● **가족발달주기에 따른 가족역할, 가족생활의 보편적 경험을 강조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가족은 다양한 가치와 생활양식이 존재한다는 점에서(고선강 외, 2023)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체계인 가족센터는 이러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 ▶ 이를 위해, 가족센터는 지역사회의 가족 특성 및 필요를 고려한 사업의 추진과 함께 가족구성원이 전 생애에 걸쳐 경험하는 다양한 역할과 관계의 변화에 대응하는 보다 유연하고, 확장적인 사업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가족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부각되어 온 다문화가족도 가구 구성, 생애 과업 등에서 변화를 보임.**

- ▶ 구체적으로, 신규 입국자 수 감소, 결혼이민자의 정착 시기 장기화, 이혼·사별 등 가구 구성 형태 다양화, 출생아동수 감소와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수 증가가 나타나고 있음.
- ▶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특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정비가 요구됨.

## 가족 변화 관점에서 본 가족센터 사업 현황

■ **가족 변화의 관점에서 현행 가족센터 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의 문제점/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유자녀가족’과 ‘다문화가족’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업 운영**

- ▶ 가족구조와 특성에 따른 가족센터 사업 이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 전체 이용자의 90% 이상(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3:174)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가족센터의 기본사업 중 유자녀가족 대상 사업이 다수인 것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음.
- ▶ 또한 가족특성별로는 다문화가족의 사업 참여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의 특별한 관심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통합되지 못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가족유형별 ‘맞춤형’서비스 접근의 한계**

- ▶ 가족구성도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추세 및 가족센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 가족센터는 가족들의 역량 강화 및 안정적 가족생활과 사회통합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1인 가구, 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가족, 군인가족, 장애인가족, 입양가족, 수형자가족, 교통사고피해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사업을 하고 있음. 그런데 가족유형별 사업을 보면 가족유형을 특정하지 않는 사업과 대상의 차이만 있을 뿐 사업 내용이나 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현상은 교육이나 문화 프로그램 등 가족센터가 대상자에 접근하는 사업 실행 방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음.
- ▶ 「가족사업안내」에서는 ‘일반가족’과 한부모가족,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그 외 가족을 구분해 명시하고 있음. 이처럼, 사업 대상을 ‘선택적’으로 배열하는 방식은 대상 집단을 역량이 부족한 가족으로 낙인찍거나 지원이 필요한 ‘어떤’ 가족을 배제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 개인이 지워진 가족 단위 접근과 가족에 ‘갇힌’ 관계 중심 지원

- ▶ 가족센터 사업별로 참여 단위를 살펴본 결과 기본사업의 참여 단위는 대부분 개별 가족인 것으로 나타남.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 때부터 아동, 노인과 같은 개인이 아닌 개인이 속한 ‘가족 전체’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가족 단위에 대한 서비스, 혹은 개인이 속한 가정을 고려하고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음.
- ▶ 가족상담과 사례관리 등 이러한 접근이 유효한 사업은 여전히 존재함. 그러나 가족 안에서 독립적 존재로 인정받기 원하는 개인의 욕구 등 점차 가시화되는 현상에 대응하는 사업 운영도 필요함. 따라서 ‘집합적 단위로서의 가족’뿐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가족 구성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개편이 요구됨.
- ▶ 또한 가족구성과 가치의 변화에 따라 돌봄과 관계 등 전통적인 가족기능을 가족 내에서만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가족 중심으로 운영하던 가족센터 사업을 가족과 개인,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확대하는 전략 모색도 요구됨.

### ● 가족변화 대응 사업 추진에 적합한 전략 수립 미흡

- ▶ 여성가족부는 가족구성의 변화에 맞춰 정책적으로 부각되는 가족(가구)인 1인가구, 노부모 부양가족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도입하고 있음. 이는 유자녀가족, 다문화가족 등 기존 이용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가족센터에게는 다소 낯선 사업으로, 중앙단위에서 사업의 방향성과 실행 전략을 기획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하지 않으면 가족센터의 사업 실행이 더디거나 모호한 방향에서 추진될 여지가 있음을 확인함.
- ▶ 정부는 가족정책의 중장기계획에서 가족다양성 인정을 목표로 설정하였지만 가족센터를 활용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해 정책 전달체계로서 가족센터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한계도 보임.

### ● 신규 수요 파악을 위한 방법과 활용 가능한 정보 부족

- ▶ 가족센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기획과 실행이 중요함. 이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현재 가족센터에서는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와 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조사하고 있음. 이 방법은 기존 이용자의 요구 파악에는 일부 효용이 있으나 가족센터의 주 이용층의 목소리만 반영되어, 다양해지는 가족 욕구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실효성이 낮음.
- ▶ 가족센터 사업 운영 과정에서 생산되는 양적·질적 정보는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모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정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가. 사업 영역 재구성

- 가족센터의 사업 영역과 세부 내용을 재구성함. 이때, 가족센터의 사업구조는 가족변화의 방향성에 맞춰 보편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재구성하는 동시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함.

<표 2> 가족센터 사업구조 재편 개요

사업영역	주요 내용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구조의 다양성과 관계의 유동성, 전통적 가족규범 약화와 개인의 선택성 증가 등의 변화 추세를 반영해 보편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사업의 영역과 내용을 재구조화</li> <li>• 사업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현행 다문화가족 및 유자녀가족 사업의 유사·중복성 최소화</li> </ul>	
사업 영역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가족돌봄, 가족관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 공동체 등 4개 사업 영역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함.</li> </ul>	
	• 돌봄	- 가족구성원의 다양화와 고령화 등으로 생애 전반에서 가족을 돌보는 다양한 상황이 출현함. 이에 기존의 자녀양육 지원 중심에서 가족 돌봄 및 자기돌봄에 대한 지원으로 범위를 확대
	• 관계	- 개인의 전 생애에서 가족/친밀한 관계의 유동성은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혈연가족에 국한하지 않고, 친밀한 관계에서 요구되는 가치와 원칙 확산, 가족과 개인의 공존 지원, 가족과 개인의 다양한 교류 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구성
	• 문제 해결	-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가족의 유동성이 심화되며, 삶의 양식이 다양해지고 있음. 이 과정에서 가족 및 개인이 직면하는 돌봄과 관계 등 일상의 어려움과 문제, 가족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경험하는 위기 등을 지원
	• 성장·역량 강화	- 보편적 사업에서 포괄할 수 없는 가족의 특수한 상황이나 욕구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구성함. 이때, 가족정책의 주요 대상인 다문화가족의 변화 특성을 반영해 유사·중복성을 최소화

- 이러한 방향 하에 기본사업(안)을 두 차원으로 구조화함. 먼저, 내용을 중심으로 돌봄, 관계, 문제 해결, 성장·역량 강화의 4개 영역으로 구성하고, 속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서비스와 물리적 공간 운영을 구분함.

<표 3> 가족변화를 반영한 가족센터 기본사업(안)

사업영역	기본사업명	
	프로그램·서비스	공간 운영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의 돌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구성원의 돌봄 역량 지원</li> <li>- 남성의 돌봄 참여 촉진</li> <li>- 돌봄 커뮤니티 형성과 교류 지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자녀돌봄 공간)</li> <li>•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교류 공간)</li> <li>• 다목적 가족소통·교류 공간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돌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역량 지원</li> <li>- 가족구성원(개인)의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 지원 등</li> </ul> </li> </ul>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하고 '안전한' 관계 형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 가치 확산</li> <li>- 비폭력·차별없는 상호존중 문화 지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과 개인의 공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부장적 가족규범 해체와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li> </ul> </li> </ul>	
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내 가족과 개인 교류 지원</li> </ul>	
성장·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개인 상담</li> <li>• 취약·위기 가족 지원</li> </ul>	

주: 1) 현행 '다문화가족성장 지원'과 '다문화가족자녀 사회포용안전망' 사업 통합

2) 현행 '다문화가족 초기 정착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 패키지',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임 사업' 통합

3) 가족센터 SOC의 공간 운영임.

이 중 가족변화에 대응해 세부 구성과 내용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돌봄'과 '관계' 영역의 재구성(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 돌봄 사업 영역의 재구성

돌봄 영역은 가족구성과 관계없는 보편적 지원을 위해 가족 돌봄 지원과 자기돌봄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 내용을 재구성함.

<표 4> 가족센터 돌봄 사업 영역의 재구성(안)

구분	현행	개편(안)
사업영역	가족돌봄	돌봄
사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희망드림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의 돌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구성원의 돌봄 역량 지원</li> <li>- 남성의 돌봄 참여 촉진</li> <li>- 돌봄 커뮤니티 형성과 교류 지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돌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역량 지원, 가족구성원(개인)의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 지원 등</li> </ul> </li> </ul>

● 가족돌봄 지원 사업은 가족구성원의 돌봄 역량 지원, 남성의 돌봄 참여 촉진, 돌봄 커뮤니티 형성과 교류 지원 사업으로 구성함.

- ▶ 가족구성원의 돌봄 역량 지원은 현행 부모역량 지원 사업의 대상을 아동을 출산·양육하는 가족과 보호자 모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령화로 노인돌봄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중고령 부모/배우자를 돌보는 가족의 역량 지원에서 시작해 점차 대상을 넓혀가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 ▶ 남성의 돌봄 참여 촉진 지원의 경우 부모와 배우자 돌봄 등 남성이 돌봄을 수행해야 하는 가족 상황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주로 자녀양육기에 초점을 두고 현행 정책의 한계에서 벗어나 전 연령대로 확대해 나가야 함.
- ▶ 돌봄 커뮤니티 형성과 교류 지원 사업은 가족센터의 역량을 고려해 느슨하게 연결되고 교류하는 돌봄 커뮤니티 활동부터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함께 돌보는 모임 발굴과 활성화 지원, 지역사회 내 돌봄 플랫폼 기능 등 다층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자기돌봄 지원 사업은 가족구성원 개인에게 필요한 일상적 돌봄 역량 지원 및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 지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함. 현재 명시적으로 1인가구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기돌봄 프로그램을 가족구성원/개인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현행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 지원을 자기돌봄 지원 사업으로 개편해 운영할 수 있음.

## 2) 관계 사업 영역의 재구성

- 관계 영역은 기존 사업의 목표와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춰 세부 사업을 성평등하고 ‘안전한’ 관계 형성 지원, 가족과 개인의 공존 지원, 지역사회 내 가족과 개인 교류 지원으로 구성함.
- 성평등하고 ‘안전한’ 관계 형성 지원 사업은 주로 가족역할 수행과 관계 개선 중심의 현행 사업을 성평등, 비폭력과 상호존중 등 관계맺음에 요구되는 원칙과 가치 확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편함.
- 가족과 개인의 공존 지원 사업은 가족구성이 개인의 선택이 되고 있으며, 다양성도 증가한다는 점에서 가부장적 가족규범을 해체하고, 새로운 가족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지역사회 내 가족과 개인 교류 지원은 가족 단위 참여를 전제로 운영해 온 가족센터의 프로그램을 지역사회로 개방해 가족과 개인의 다양한 교류를 지원하는 것으로 재구성함.

<표 5> 가족센터 관계 사업 영역의 재구성(안)

구분	현행	개편(안)
사업영역	가족관계	관계
사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역할 지원</li> <li>• 부부역할 지원</li> <li>• 이혼전·후 가족 지원</li> <li>• 다문화가족관계향상 지원</li> <li>•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li> <li>•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li> <li>• 가족상담</li> <li>• (손자녀 돌봄) 조부모 역할 지원</li> <li>•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하고 ‘안전한’ 관계 형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 가치 확산</li> <li>- 비폭력·차별없는 상호존중 문화 지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과 개인의 공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부장적 가족규범 해체와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내 가족과 개인 교류 지원</li> </ul>



## 나. 사업의 실행력 제고 방안

### 1) 사업 실행 관련 탐색을 위한 리빙랩 운영

- 앞서 본 사업(안)의 실행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족센터와 협력해 사업(안) 추진에 필요한 센터 내외부 자원과 역량, 효과적인 실행 방법 등에 대해 탐색하는 리빙랩을 운영함.
- 리빙랩은 가족센터 SOC 센터 2곳과 진행하였음. 가족센터 SOC의 경우 그동안 가족센터가 포섭하지 못한 주민층을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사업의 기획과 운영 과정에서 주민이나 지역 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해야 하는 과업을 부여받아 창의적 사업 개발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리빙랩 운영이 가능하였음.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센터 SOC 2곳과 사업(안)의 실행에 필요한 센터 내외부 자원과 역량, 효과적인 실행 방법 등에 대해 탐색하였음.

<표 6> 가족센터 사업 실행 탐색 과정 개요

구분	현행
A 가족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 참여 촉진과 신규 수요 발굴 방법</li> <li>•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적 사업 기획의 가능성</li> </ul>
B 가족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관기관들과의 접점 형성과 네트워킹 방법</li> <li>• 신규 수요 발굴과 사업 운영을 위한 역량</li> </ul>

### 2) 사업 실행 전략 및 과제

#### 가) 가족센터 설치 근거 법령 마련

- 사업의 방향성과 내용 정비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함. 이때, 가족센터가 중앙정부의 가족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가족센터의 사업과 기능 개편을 위해서는 가족 지원 관련 법령 정비가 적극 검토되어야 함.
  - ▶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정책의 기본법적인 지위를 가지며,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은 특정 가족유형을 지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법률들은 위계적 관계를 설정하지 못함. 채 각 법률에 근거해 건강가정기본계획,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등 중장기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대상별로 정책을 집행하는 등 병렬적으로 운영됨. 이러한 한계를 그대로 둔 채로는 가족센터가 가족유형에 관계없이 가족·개인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지원을 하고, 지역의 가족변화 추세에 맞춰 유연한 사업을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 따라서 가족변화의 추세를 반영해 가족정책의 기본법적 지위를 가진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고, 그에 맞춰 가족센터의 기능과 사업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혼인·혈연 중심으로 가족을 정의(제3조)하고,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제8조)을 강조하는 등 가족구성과 관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족다양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요구됨.
  - ▶ 근거 법령 개정을 통한 기대효과로는 가족센터 사업의 정체성과 방향성의 명확한 제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가족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방향성과 내용 조정, 예산구조 등 운영체계의 실질적 통합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있음.



## 나) 과정 중심의 사업 지원과 평가

- 재구성한 사업을 지역의 가족변화 수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결과보다는 운영 과정을 지원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함. 다음에서는 과정 중심의 사업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안함.

- ▶ 실적 집계가 아닌 과정을 평가
- ▶ 사업계획 단계 지원 강화
- ▶ 사업의 실행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단계별 구체적 지원 방법 마련
- ▶ 정보와 아이디어 교류의 장 마련

## 다)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는 전략 마련

- 다양한 매개체를 고리로 초기 접점 형성 : 공간, 관심사, 사람 등

- 지역 기관들과의 다차원적 협력 전략 모색

- ▶ ‘느슨한’ 연결부터 시작 : 가족센터와 접점이 없었던 기관, 기존 사업 내에서는 연계의 필요성이 낮았던 기관 등과 사업 협력이 필요할 때 유효한 전략
- ▶ 기관 간 자원 연계 : 사례관리나 상담 등의 사업 실행 과정에서 가족센터가 이미 경험해 본 방법으로, 공간 자원 등을 통한 연계로 가족센터의 수요 확대
- ▶ 신규 수요나 사업 발굴 협력 : 워크숍과 같은 형태로 운영하거나 타 기관을 방문 또는 관련 사업에 참여해보는 방식의 협력이 가능
- ▶ 가족센터 사업에 참여하거나 공동사업 추진 : 기관들이 강도 높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각 기관의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해볼 여지가 있을 때 가능

## 라) 센터 종사자의 역할 전환과 수요자 중심의 조직 운영

- 가족센터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실행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센터 종사자들의 역할과 조직 운영에 대한 개선도 요구됨.
- 가족센터 종사자는 서비스 제공자-수요자의 구분을 벗어나 지역 주민이 원하는 활동을 가족센터 공간에서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센터와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수요자들이 좀 더 주체적, 자율적으로 센터 사업에 참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필요 있음. 관련해 종사자 재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역할 전환을 지원해줘야 할 것임. 또한 사업의 기획과 운영을 총괄하는 센터장의 새로운 리더십 형성을 지원함.
- 수요자의 욕구가 복합적이고 다양해지는 추세이므로, 유연한 조직 구성과 운영을 통해 이에 대응할 필요 있음.

<표 7> 가족센터 사업 실행 전략 및 과제 요약

구분	현행	개편(안)
가족센터 설치 근거 법령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변화의 추세를 반영해 가족정책의 기본법적 지위를 가진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고, 그에 맞춰 가족센터의 기능과 사업 재정의</li> <li>-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구성과 관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족다양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li> <li>-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특정 가족에 대한 지원법은 기본법에 명시되지 않은 정부의 추가 지원이나 세부 집행 관련 사항 등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정비</li> </ul>	여성가족부
과정 중심의 사업 지원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적 집계기 아닌 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li> </ul>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계획 단계 지원 강화</li> </ul>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의 실행 프로세스 설계 및 단계별 지원 방법 구체화</li> </ul>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와 아이디어 교류의 장 마련</li> </ul>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
참여와 협력 촉진 전략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매개체를 연결고리로 지역주민과 초기 접점 형성</li> </ul>	가족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기관들과의 다차원적 협력 전략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느슨한’ 연결</li> <li>- 지역기관들과 자원 연계</li> <li>- 지역기관들과 신규 수요나 사업 발굴 과정 협력</li> <li>- 가족센터 사업에 참여 또는 공동사업 추진</li> </ul> </li> </ul>	가족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센터 종사자의 역할 전환과 수요자 중심의 조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들이 주체적, 자율적으로 센터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li> <li>- 수요자 관점의 사업을 위한 유연한 조직 구성</li> </ul>	가족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여성가족부

## 참고자료

고선강·손서희·서찬란(2023). 가족다양성을 고려한 가족센터 사업 운영에 대한 연구: 가족센터 실무자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7(2), 19-33.

김소영·최인희·문희영·구혜령·이인선·권소영(2023). 가족변화 관점에서 가족센터사업 현황 분석 및 개편 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란·정가원·배호중·이진숙·김혜경·황정미(2019). 가족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추진전략 연구. 여성가족부.

김영란·조선주·정가원·최진희·김수진(2020). 가족센터 표준운영안 개발 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박정윤·김영란·손서희·진미정(2019).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손서희·김미영(2019). 서울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통합서비스 운영 경험.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3(4), 1-21.

송효진·황정미·김수정·박광동·김은지·김영란·박복순·최진희·김수진·홍윤선·변혜정·조은주·김수완·배지영·김현희·이상모·장원규·홍주은·이지영·김미현·김동진·김수완·장지영(2021). 개인화 시대, 미래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포용적 법제 구축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여성가족부(2023). 2023년 가족사업안내(Ⅰ).

이선형(2018). 가족서비스 통합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방안 마련.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3). 2022 가족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과